

실업자는 있는데...인력수입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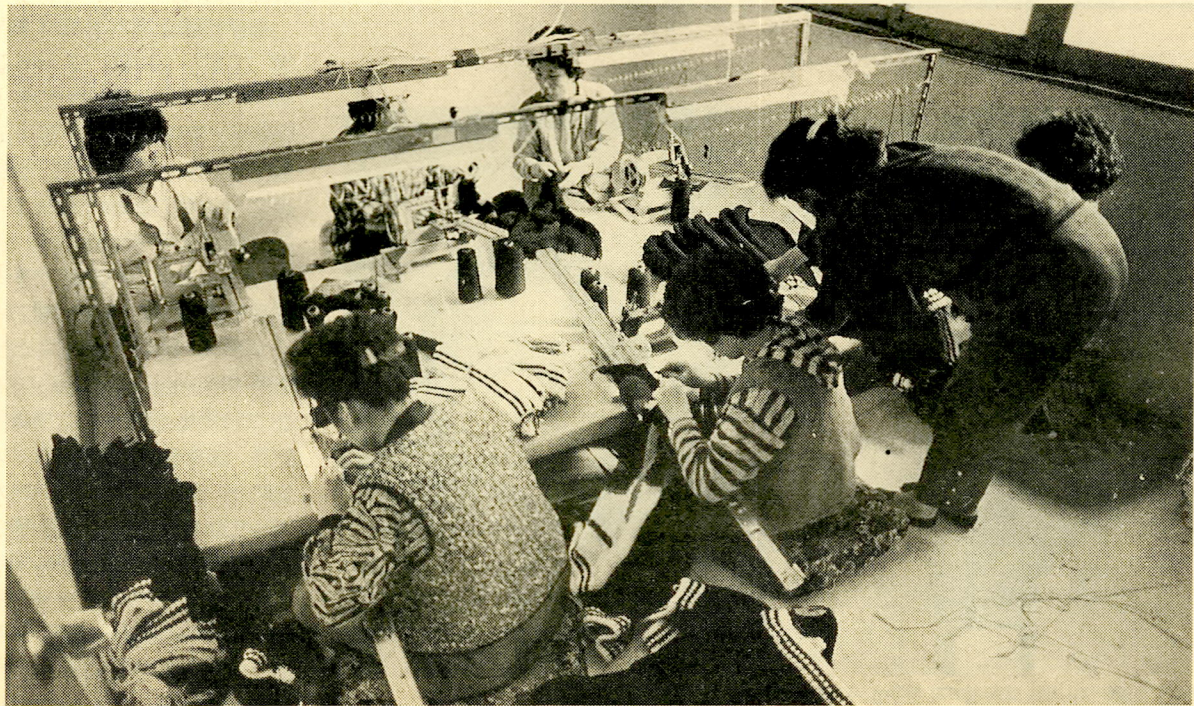
여성노동현실 외면, '인력부족' 빚자한 안이한 발상

여성노동자 위협하는
외국인력 수입

국내의 심각한 노동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인력 수입'이 필연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 등으로 국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 특히 외국인력이 주로 미숙련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이 일반화될 경우 주로 단순노동 직종에 집중돼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받게 될 위협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왕인순 씨는 "일하기를 원하는 기혼여성들이 아이들이나 가사노동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마련한다면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부족현상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로공단 내에 자리한 사전자(고용주가 기사내용을 약용할 것을 우려해 노조측에서 이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3백명여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견업체. 77년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노조가 요구하는 복지나 임금인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업체에는 자연감원 이외의 인력부족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주44시간 근무가 철저히 지켜지고, 생리·월차휴가도 누구든 눈치보지 않고 받아낼 수가 있다. 상여금과 수당을 합치면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
다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의 꿈.

기업주들은 값싼 외국 노동자를 반기는 실정.
해외인력 수입은 단순노동직종에 집중돼 있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단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임금을 손에 쥌 수가 있어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이 곳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조위원장 문모 씨에 의하면 사전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7년이며 최고 18년 장기근속자도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들이 이 직장을 평생일터로 생각하는 이유는 '관리자들의 인간적인 대우' 때문. 사무직과 생산직간의 별다른 차별이 없고, 관리자들도 여성근로자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노조원들의 설명이

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직장탁아만 설치된다면 많은 기혼여성들이 이곳에 취업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한다.

**임금 높을수록
생산성도 높다**

근속년수가 길고, 노동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은 만큼 생산성이 뛰어나고, 제품불량이 극히 적어 관리자측에서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별 불만이 없다고. 반면 같은 공단 내 ○ 실업

의 경우는 해마다 1백여명이 회사를 빠져나가 88년 4백70여 명이던 노동자 수가 90년 말 2백4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회사는 잔업이 매우 많은 반면 초임이 19만원 선에 머무는 등 임금수준이 낮고, 회사 측이 노조의 활동을 저지해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모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노동문제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비교하면서 기업주들이 주장하는 노동인력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비판한다. "노동조건만 좋아진다면 노동력을 충원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인력부족' 호소엔 적극적
인력모집엔 소극적**

고용주들은 '인력부족'을 호소하면서 잔업 등으로 노동시간을 늘려 나가고 있지만 인력충원에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노조활동 경력자를 배제시키기 위해 '공개모집'보다는 '소개'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를 구하고 있다는 것.

노동계는 노동활동을 억압하고, 저임에만 의존하려는 국내기업의 특성이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갈 성장의 몫을 줄이고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식의 교육지책 만들어 냈다."고 비난했다.

외국인 고용을 반대하는 의견은 학계에서도 일고 있다.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 교수는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도 외국인력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력수입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국내노동력을 완전 고용한 상태이며, 가사노동과 주택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라는 것.

**외국인 불법체류
점차 늘어날 전망**

현재 노동부와 법무부도 이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해외인력 수입을 재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광여행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는 기정사실화 된 실정이다. 91년 3월 현재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 국내 업체가 "임금도 싸고 노사분규도 없다"는 눈 앞의 이익 때문에 이들을 반기게 된다면 국가가 이들을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노동계는 "국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탁아나 직장탁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 복지문제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